
2005 일본총선 결과 분석

이이범(국민대 일본학연구소)

금번 제44회 일본총선(중의원선거)은 집권 자민당이 전체 중의원 480의석 중 296석(점유율 61.6%)을 획득하는 압승으로 끝났다. 이러한 자민당 압승은 1986년 이후 15년만의 과반수 의석의 확보였고 1960년 이후의 기록적인 대승이었다. 자민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31석을 포함하면, 여당 전체 의석수는 327석으로 전체의석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68%에 이른다. 반면에 지난 2000년과 2003년 총선 이후 제1 야당의 지위를 확실히 다져온 민주당은 선거 전 177석(점유율 36.9%)에서 113석(점유율 23.5%)으로 대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자민당 압승과 민주당 참패가 발생한 원인과 이러한 선거결과가 향후 일본의 정당정치 구도와 의회정치 향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고, 민주당이 참패한 이유는 대체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수상이 선거정국을 자신에게 유리한 개혁 대 반개혁이라는 구도로 이끈 선거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금번 총선은 고이즈미가 일본의 구조개혁의 본체라고 주창해온 우정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고, 고이즈미 수상이 즉각 중의원을 해산시킴으로써 시행되었다. 참의원에서의 부결은 본 법안에 반대해온 자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란에 따른 것이었고, 이들 의원들 가운데 33명이 탈당하여 출마함으로써 금번 총선은 자민당 분열선거의 성격이 농후하여 자민당에게 불리할 수도 있었던 선거였다.

그럼에도 고이즈미 수상은 금번 선거를 우정민영화라는 개혁에 대한 지지 세력과 반대세력의 대결인 것으로 단순화시키는데 성공을 거두었고, 그동안 자민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정치개혁을 갈망해왔던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대하는데 큰 성과를 올렸다. 그런데 금번 선거에서 매스미디어의 보도는 법안 반대세력에 대한 고이즈미와 자민당의 대응 전략과 반대 세력들의 움직임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금번 선거에서는 매스미디어의 의제설정 효과(agenda setting effect)가 명확히 나타났고, 이는 고이즈미의 단순화 선거전략이 단기간 내 성공을 거두는 주요한 토대가 되었다.

둘째는 고이즈미 개혁정치에 대한 무당파 유권자의 지지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무당파 유권자들은 1990년대 후반이후 전체 유권자 가운데 50%를 상회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 무당파 유권자들의 40-50%는 정치에 관심이 높고 선거에 적극 참여한다. 이들 무당파들은 1996년, 2000년, 2003년 총선을 거치면서 자민당에 대한 지지를 축소해온 반면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증가시켜왔다. 2000년대 들어 민주당이 2대 정당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데 무당파의 기여가 절대적이었다. 그런데 고이즈미 수상은 우정민영화 법안의 처리와 중의원해산 과정에서 많은 유권자들에게 과거의 자민당 리더들과는 차별화된 강력한 개혁의지와 리더십을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 금번 총선에서 무당파의 자민당 지지율이 2003년 총선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고이즈미 개인의 개혁의지와 리더십에 주로 기인했다. 이러한 무당파 투표자들의 자민당지지 증가는 곧바로 민주당 지지표의 감소와 민주당 참패로 귀결되었다.

셋째는 투표율 상승의 영향을 들 수 있다. 특히 자민당의 지지율 증가는 투표율의 상승과 매우 밀접하다. 1980년대 이후 일본 선거에서 자민당의 지지율 내지 의석의 점유율은 투표율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여 왔다. 자민당 지지층의 특징 중의 하나는 소극적인 지지자가 많다는 점인데, 이러한 소극적 지지자들의 투표 참가율이 높을수록 투표율은 상승했고, 자민당 의석율도 증가했다. 금번 투표율은 지난 2003년 총선에 비하여 7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그 결과 자민당의 득표수 점유율은 2003년에 비하여 소선거구에서 4포인트 정도 증가했고, 반면에 민주당은 0.3%정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투표율증가와 자민당의석 증가의 관계는, 투표율이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도권지역과 대도시 지역에서 현저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지역 4개 지역에서만 전체 상실의석수 62석 가운데 35석을 잃었다. 금번 투표율의 상승은, 앞서 언급한 고이즈미 수상 개인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리더십을 지지하고, 매스미디어의 의제설정효과로 영향을 받은 투표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이외에도 함께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과의 선거협력이 효과적으로 확대되어 여당의 득표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반면, 같은 야당인 민주당과 사민당과의 선거협력은 실패한 점도 고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민당의 압승과 민주당의 참패가 향후 일본의 국내정치 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먼저 향후 일본정당 시스템에 대하여 검토한다면, 2000년대 들어 민주당의 성장으로 자민-민주 2대 정당시스템이 정착되었다는 시각에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민주당은 2000년대 들어 총선에서 무당파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지지를 받아 세력을 성장시켜왔다. 민주당은 2003년 총선에서는 전체 의석수의 36.9%를 차지하였고, 비례대표구에서는 자민당보다 2.3%정도 득표의 우위를 얻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2005년의 여러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자민당의 정당 지지율은 꾸

준히 30%대 중반을 유지하여 자민당 지지기반은 안정적이었고, 선거직전에는 40%를 넘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지지율은 제1야당이면서도 10% 초반 대에 머물렀고 2003년 총선 때는 선거 직전 30%에 근접하였지만, 금번에는 20%를 가까스로 넘길 정도로 그 지지기반은 허약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본다면, 2005년 총선을 계기로 일본의 정당시스템은 1980년대 구 사회당의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면서 확립되었던 자민당 절대우위의 일당우위시스템으로 회귀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금번 총선을 전후한 시기에 나타났던 자민당 지지율의 상승은 고이즈미 수상의 인기에 편승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자민당의 압승이후의 다음 선거에서는 항상 자민당 의석이 감소했던 과거 경험에서 볼 때, 2007년 참의원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의 의석점유율은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더라도 다소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창당된 지만 10년이 지났고, 2000년 총선부터 제1야당으로 성장해왔음에도 아직도 주요 지지기반은 정당 지지 성향이 불안정한 무당파층이다. 그리고 일본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민주당의 수권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민당 일당 우위의 정당시스템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편 금번 총선의 결과 가운데는 향후 일본의 국내정치 상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들의 변화가 있었다.

첫째로 우정민영화 법안의 부결과 중의원해산 과정에서 자민당의 분열에 따른 파벌구도의 변화이다. 2001년 4월 고이즈미 수상은 내각을 출범하면서, 그 동안 자민당 정권의 중추를 이루었던 최대 파벌 구 하시모토파(橋本派)에 대한 적대적 자세를 노골화해왔다. 고이즈미 수상은 내각 각료임명과 자민당 간부 인사에서 그 이전까지 관행화되었던 파벌별 안배를 일체 배제한 채 독단적 결정으로 일관해왔다. 그 과정에서 고이즈미 수상이 가장 견제하고 무시한 파벌이 구 하시모토파 파벌이었다.

고이즈미 수상은 2001년 자민당 총재경선에 3번째 도전하면서 “일본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자민당을 붕괴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서 붕괴시킬 주 대상이 금권정치와 각종 이권정치를 주도했던 구 하시모토파 파벌이었다는 점에 이론은 없다. 금번 우정민영화 법안의 중의원 의결과정에서 반대했던 37명의 중의원 의원들은 구 하시모토파 16명, 구 가메이파(亀井派) 12명, 구 호리우치파(堀内派) 3명 등이었다. 고이즈미 수상은 금번 선거에서 이들 반대파 37명을 출당시켰고, 이들 지역구에는 정치신인을 대거 발탁하여 선거에 임하였다. 총선결과 파벌별 당선자분포를 보면, 고이즈미 수상의 모리파(森派)가 최대파벌로 부상하고 최대 파벌이었던 구 하시모토파 파벌은 제2의 파벌로 쇠락했다. 구 하시모토파와 함께 우정민영화 반대를 주도했던 가메이파는 중의원 의원수가 20미만의 소수파로 전락했다. 그리고 제3의 파벌이었던 구 호리우치 파벌은 호리우치 전 회장 자신이 우정민영화 법안에 반대했고, 기권한 의원도 5명에 달하여

파벌 세력의 약화가 불가피하다.

과거 자민당의 파벌정치는 금권정치와 이권정치의 비판을 받아왔지만, 다양한 정치성향을 지향하는 파벌간의 견제와 타협으로 정책의 조화와 균형이 지켜져 왔다. 과거 자민당내 보수정치를 주도해온 세력은 크게 2대 조류로 나뉜다. 즉 하나는 요시다(吉田茂) 전 수상의 계보를 잇는 이른바 보수본류(保守本流)파로, 이는 2대 파벌인 다나카(田中)-다케시타(竹下)-구 하시모토파와 이케다(池田)-오히라(大平)-미야자와(宮澤)-호리우치파로 대별된다. 다른 하나는 기시(岸)-후쿠다(福田)-미즈즈카(三塚)-모리(森)로 이어지는 강경 보수파이다. 전자의 보수본류파의 정책기조는 경제우선, 미일동맹중시, 경무장 노선으로 대변되고, 후자는 정치우선, 대미독립, 자주헌법제정, 재군비 등으로 대변된다.

그런데 고이즈미 수상이 집권이후 반 하시모토파 정책을 노골화하고, 독단적 정책결정을 지속하면서 모리파와 보수본류파들 사이의 대립·갈등 구조는 심화되어 왔다. 그리고 고이즈미 수상의 구조개혁 정책과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를 강행하고 주변국들과 외교마찰을 심화시키면서 전면적인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번 총선에서 모리파와 고이즈미 수상과 친밀하면서 강경 보수파인 야마자키파(山崎派)는 압도적 승리를 거둔 반면에 보수본류파는 조락해가고 있다. 이러한 자민당 내 파벌간 세력변화와 대립구조의 심화 양상은 향후 일본의 주요 정책의 추진과 정국의 흐름을 결정하는데 가장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2006년 9월 고이즈미 수상의 후임 총재가 누가 될 것인가도 일본 정치를 결정할 주요 변수의 하나이다. 향후 후임총재 선출을 둘러싼 경쟁구도는 앞서 언급한 보수본류파와 모리파 간의 대립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현재 고이즈미 수상의 후임자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은, 모리파내 아베신조(安部晋三),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의 3인과 구 호리우치파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고노(河野)그룹의 아소 타로(麻生太郎)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력 후임자들의 대부분은 고이즈미의 개혁정책을 추종하면서, 1990년대 중반이후 일본 정계에서 강화되고 있는 '일본국익의 중시' '일본자주성의 확보',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기여 확대'와 같은 국가중심적 정치관과 정치대국화 논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로는 민주당의 참패 책임을 진 오카다 카츠야(岡田克也) 대표의 후임으로 1962년생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가 선출되면서 자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중심세력의 세대교체도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라는 점이다. 자민당의 경우 초선의원이 83명에 달하여 이들이 특정 파벌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항별 자주적 행동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 내 의원들의 행동에서 정책 또는 이슈별로 초파벌적인 동조현상은 1990년대 후반이후 증가해왔다. 이런 현상은 금번 중의원에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인기가 높은 '구조개혁'이란 메뉴에서 더욱 현저할 것이며, 이는 향후에도 고이즈미 수상과 모리파가 자민당 정치를 주도해 갈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경우 역시 오자와 이치로의 퇴진과 함께 정책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역할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6년 창당이후 제1야당의 지위를 확고히 해왔지만 유권자의 다수는 아직도 수권정당으로서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하여 여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을 어떻게 불식시켜 갈 것인가가 민주당의 최대과제라고 본다.

또한 일본의 정당정치의 구도에서 볼 때 향후 정치개혁, 주요 정책현안의 추진과정에서 공명당이 어떠한 선택을 해 갈 것인가가 매우 의미심장하다. 자민당 보수 세력들이 주요시하고 있는 개헌과 주요 안보정책에서 공명당의 입장은 자민당과 민주당의 차이보다도 더 큰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자민-공명의 정책상의 거리가 향후 일본정당 정치와 정국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2005년 10월 17일 미래전략연구원>